

통 상 법 률

목 차

2018 / 8 (통권 제140호)

◆ 시 론

1.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과제 김 현 / 3

◆ 논 단

1. 국제투자협정상 무력충돌 시 해외투자보호 관련 규정(조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 태 정 / 10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1. 들어가며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법률시장은 일단 추가적인 개방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외국로펌의 지분율을 49%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개방은 국내 법률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타당한 조치이다. 다만 현재의 개방상태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법률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막기 위해서 다른 시장을 개방해야 하거나 우리가 개방을 원하는 다른 나라의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률개방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과정을 검토하고, 법률시장의 개방 현황 및 외국법자문사법상 규제현황을 토대로 중전의 개방정책이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추

가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대비해 국내 법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2. 법률시장 개방의 단계적 개방과 이유

가. 단계적 개방

2007년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ASEAN(10개국), 인도, EU(28개국)와 FTA 협상을 하였고, 같은 해 4월 체결된 한미 FTA협정에 법률서비스를 포함시키면서 국내 법률시장의 대외적 개방이 예정되어 있었다. 협정의 이행으로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009년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하였고, 약 10년에 걸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다.

1단계로 인가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및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의 원자격국법 자문을 허용

하였다. 2단계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단계로 국내외 로펌 간의 합작회사, 즉 조인트 벤처 설립을 허용하고 합작회사의 국내변호사 고용을 허용하였다. 다만 외국 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을 49%이하로 제한하여 사실상 외국 로펌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 한국 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와 3단계 개방까지 합의된 국가는 미국, EU,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베트남이다.¹⁾

나. 이유

법률시장 개방은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며, 국내 법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영미계 로펌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아직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국내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

쟁상태는 법조윤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대형 토종로펌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영미계 로펌에 의하여 대부분 합병되었다.

법률시장 개방의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모두 예측되는 가운데 협정 초기에는 외국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컸기에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하였다.

3. 세계 법률시장의 규모와 주요국 개방현황²⁾³⁾

가. 세계 법률시장의 규모

세계 법률시장은 영미계 로펌이 장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2015년 세계 법률시장 규모는 약 5,934억 달러인데,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은 2,898억 달러로 48.8%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영국은 495억 달러로 8.3%를 차지한다.

미국 법률전문지인 아메리칸 로이어(American Lawyer)가 2015년 매출액을 기

1)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동향 및 후속대책 연구. 13 (2017).
 2) 김두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47, 49-50, 55 (2017).
 3) 박행남. 법률시장 개방의 정책과 과제_주요국 법률시장 개방 실태와 그 시사점. 국회도서관. 22-26 (2009).

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로펌’ 중에는 미국과 영국 로펌이 무려 93개를 차지하고 있다(미국 로펌 81개, 영국 로펌 12개). 1위는 매출액 26억5000만 달러(약 3조원)를 기록한 미국의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 & Watkins)가, 2위는 매출액 26억2000만 달러(약 2조9600억원)를 기록한 미국의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가 차지했다. 나머지 7개 로펌의 국적은 캐나다(2개), 중국(2개), 호주(1개), 독일(1개) 그리고 우리나라(1개, 김·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5년 매출액 59위, 변호사 수 68위, 파트너당 수익 46위를 차지했다.⁴⁾

나. 주요국 개방현황

1) 주요국의 법률시장 개방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EU는 회원국 사이에 다른 회원국 변호사에게 일정 조건 하에 자국 변호사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외국변호사가 Solicitor⁵⁾와 동업하는 것과 공인 법무법인에 주주나 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⁶⁾ 독일은 외국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자격취득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

고, 등록 외국 변호사에 의한 현지 변호사 채용, 현지 변호사와의 동업과 공동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률시장을 폭넓게 개방한 독일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이후 영미계 로펌이 독일의 유능한 변호사를 스카우트하고 독일 로펌을 합병하여 독일 법률시장을 장악하였다는 점이다.

2) 일본은 1987년 4월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외변법)을 제정해 법률시장을 개방한 이래 18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방해왔다. 외국법 사무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일본 내 법률사무소 개설과 자격취득국법 및 제3국법에 대한 자문 업무는 허용하되, 일본 변호사와의 동업과 일본 변호사 고용을 금지했다. 그 후 외변법을 10여 차례 개정하며 일본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간 특정 공동사업을 통한 제한적 동업을 허용하였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5년 개정으로 일본변호사와의 동업과 고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5년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개방하기까지 소요된 기간과 결과를 주시할 필요

4) 세계 100대 로펌 중 68위 선정 - The American Lawyer's Global 100 (2016). 김·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수상소식 (2016. 10. 15.).

5) 사무 변호사(토지·건물 매각을 위한 서류 관련 업무나 법률 자문 등을 주로 하는 변호사).

6) 법무부, 법률시장 개방국들의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172-173 (2004).

가 있다. 일본은 전면적 개방까지 총 18년이 걸렸고, 특정 공동사업에서만 동업을 허용하는 과도기적 제도를 통해 외국로펌이 자국법 법률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일부 토종 로펌은 일본법 관련 업무를 특화하면서 대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한 반면 중대형 토종로펌은 대체로 영미계 로펌에 합병되었다.

3) 싱가포르는 1970년경부터 외국로펌의 자국 진출을 허용하고 2000년 외국로펌과 싱가포르 로펌 간에 합작회사(Joint Law Venture)와 정식업무 제휴(Formal Law Alliance)를 허용했다. 그리고 외국변호사에게 일부 분야에 한하여 싱가포르법에 관한 업무를 허용하였다. 싱가포르는 일찍이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적이었지만 국내외 로펌 간 합작회사 설립만 허용하고 동업은 제한하고 있다.

4) 홍콩은 1994년 홍콩로펌과 외국로펌 간 제휴를 허용하되 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국 로펌은 홍콩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동업할 수 없지만 홍콩 로펌은 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휴관계나 외국 변호사 고용시 외국변호사 수가 홍콩 변호사 수보다 많아서 안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5) 러시아는 1991년 외국 변호사와 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및 러시아 변호사와의 동업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외국법 자문만 허용하다가 2003년 8월부터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과 고용을 허용하였다. 다만 외국 법률사무소가 국내법 자문이나 법정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주요국들의 개방현황을 살펴보면, 자국 법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을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법률시장에서 영미 특히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법률개방으로 영미계 법률산업에 의한 자국 법률산업의 잠식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법률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에 있어서 유념해야 한다.

4.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 현황⁷⁾

가. 국내 법률서비스의 무역 수치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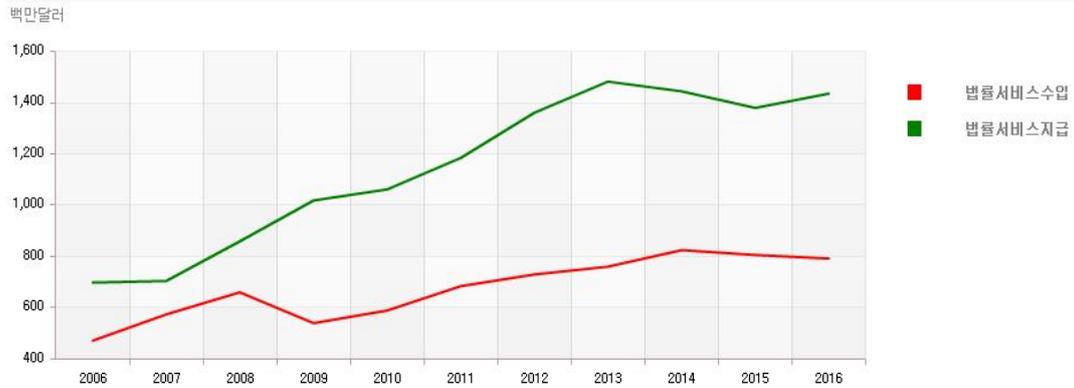
법률서비스 수입 및 지급 통계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법률서비

7) 김두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2-53, 55-63, 65-67 (2017).

8) 한국은행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

스는 무역에서 계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고, 적자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적자액은 52억 430만 달러(약 6조원)이다.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큰 속도로 증가한 탓으로 분석되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미국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이었다.



나. 국내 로펌의 외국변호사 고용현황

10대 주요 법무법인이 2017년 3월 고용하고 있는 외국 변호사(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 또는 내국인) 수는 총 431명으로, 국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 수를 합한 전체 3,084명 중 1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76.5%(316명)는 미국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미국이 국제 법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된 나라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이고, 미국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한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07년경 동남아시아와 유럽, 러시아 등 해외에 8개의 사무소를 개소하여 해외 법률시장 진출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현지 사무소 개설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모두 철수했다.

다. 해외사무소 개설현황

2017년 10월 현재 국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해외사무소는 총 39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무소가 설치

라. 외국법자문사법상 규제 및 외국 법률산업의 국내진출 현황⁹⁾

1) 법률시장 개방여부의 핵심은 해외 로

9) 법무부 홈페이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 (2018. 3. 9.),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현황 (2016. 10.).

펌이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우리나라 로펌과 동업을 할 수 있느냐이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미국과 EU와의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외국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로펌이 국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외로펌이 우리나라 로펌과 동업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2) 등록된 외국법자문사 수

2012년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법 자문사는 총 151명이다. 이들 중 미국 76.8%(116명), 영국 15.2%(23명), 호주 5.2%(8명), 뉴질랜드 0.6%(1명), 프랑스 0.6%(1명), 중국 0.6%(1명), 싱가포르 0.6%(1명)로 92%가 영미법계 변호사이다.

3) 등록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수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등록한 외국 로펌은 총 27개이며, 한국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22개소는 미국이 본사무소이고, 5개소는 영국이 본사무소로 영미의 국내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이들의 국내 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가 3명 내지 9명 정도의 규모지만 대부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추후 한국 변호사의 고용이 허용되면 국내 사무소의 규모를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4) 합작법무법인 설립수

2017년부터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합작법무법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5. 개방현황 분석

가.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국내 법률서비스는 국제수지면에서 지급규모가 훨씬 크고(적자상태), 대형 법무법인은 대외 관련 업무를 위해 비교적 많은 외국변호사를 채용하였는데 주로 미국 변호사이며, 국내 법무법인의 해외진출은 동남아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 2018년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합작법무법인을 허용하는 단계까지 개방되었고, 해외 로펌이나 법조인력은 꾸준히 국내 법률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외국합작참여자의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지분 제한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외국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으로 진출하여 국내 법률시장은 단기간 안에 잠식되었을 것이다.

한편 지난 해 한 중소로펌은 외국법자문사법의 지분제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중소로펌들은 지분제한 규제가 대형로펌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소로펌이 해외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결어 - 향후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본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개방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법 자문사법 시행을 통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주요국의 개방현황과 우리나라의 법률교역 수치 및 개방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개방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와 달리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제한으로 인하여 해외 법률산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하지 않다거나 국내 법률시장의 외연 확장에 장애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인가받은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와 등록된 외국법자문사가 적지 않고, 국내 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등록 외국 변호사들의 수까지 고려하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외국은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법률개방을 계속 요구해 올 것이다. 언제라도 FTA 협정은 개정될 수 있고, 법률시장의 여건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협정에서 현상을 유지한 것에 안도하지 말고,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수요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관리에 달려있다. 법률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변호사들은 스스로 국내법에 정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마하고, 우리나라와 법률교역이 활발한 외국법에 대한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세계 법률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영미와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 법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변론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형로펌은 유능한 외국법자문사 또는 한국 변호사를 추가영입하고, 국내법이나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부티크 로펌으로 거듭나는 등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형로펌 역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을 잘 관리하여 독일 대형로펌들처럼 외국로펌에게 유능한 인재들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은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로스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커리큘럼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투자협정상 무력충돌 시 해외투자보호 관련 규정(조문):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 태 정

*논문접수: 2018. 8. 10. *심사개시: 2018. 8. 13. *게재확정: 2018. 8. 20.

— < 목 차 > —

I. Introduction	B. Problems: The Ambiguity in scope and definition of the devices
II. Armed conflict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 Solutions: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A. Various Types of armed conflict Devices.	III. Conclusion
1.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3. War Clause	
4.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5. Extreme Emergency	

I. Introduction

There is no obvious connection betwee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 and the law which applie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or hostilities. However, treaty obligations on protection of foreign investors are not automatically suspended as soon as an armed conflict erupts; on the contrary, IIA often contain clauses which address

precisely such situations – often terme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r “essential security clause.” These clauses have been interpreted by arbitral tribunals and ultimately protected foreign investment projects in case of armed conflict or hostilities. For instance, in *Amco Asia v.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investor’s local contracting partner took over the investment project (a hotel) by force with the support of the Indonesian armed forces.¹⁾

1) *Amco Asia Corporation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Indonesia*, Award, 20 November 1984, 1 ICSID Rep 413;

The tribunal decided that although the forcible takeover was not attributable to Indonesia, it was still in breach of treaty obligations because it failed to protect the investor against such a takeover. In *AAPL vs. Sri Lanka*,²⁾ the tribunal ruled that Sri Lanka faile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to protect a shrimp farm in the course of a military operation against the Tamil Tigers. The military force believed the shrimp farm was the military base, and they attacked it. The farm was, in fact, a part of the UK's foreign investment infrastructure. In the course of the military operation, 12 employees of the shrimp farm were killed. The tribunal ruled that Sri Lanka's military force should have taken precautionary measures to distinguish the investment infrastructure from the military base.

This article primarily introduces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protection clauses in case of armed conflict and further examines the ambiguous nature of such clauses with respect to their scope and interpretative standards. To respond, the article suggests

the parties to utilize a reservation list and an Annex. By carving out a domestic law in either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or an Annex, the parties could draw a clear boundary of regulatory power over the armed conflict situation. This will increase a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when and how the foreign investments may be interrupted.

Part II examines different types of armed conflict clauses and uncertain nature of those devices. Part III introduces the solutions to such uncertainty and ambiguity. Part IV concludes the article.

II. Armed conflict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 has various clauses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s in case of a national security emergency or war. However, many of these clauses have ambiguous definitions and scope. For instance, a certain clause requires host

see also *Rumeli v Kazakhstan*, Award, 29 July 2008; *Saluka Investments BV (The Netherlands) v The Czech Republic*, Partial Award, 17 March 2006; *Eastern Sugar v Czech Republic*, Partial Award, 27 March 2007.

2) *Asian Agric. Prod. Ltd. v.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CSID Case No. ARB/87/3, available at <http://www.worldbank.org/icsid> (follow "cases" hyperlink; then follow "List of Cases" hyperlink; then follow "Concluded Cases" hyperlink; then scroll to "Asian Agricultural Products Limited v.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CSID Case No. ARB/87/3)").

countries to protect investments only in cases of armed conflict, and different tribunal rules have a clause that requires protection in case of economic emergency, as well. Inconsistent rulings confuse investors and host countries, and the countries' lack of negotiation skills and unequal bargaining power aggravate the problems of ambiguity and uncertainty.³⁾ This section reviews the various devices in IIA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s and explains the ambiguity and uncertainty in scope and definition.

A. Various Types of Armed Conflict Devices.⁴⁾

1.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Many IIAs include provisions of “full protection and security.”⁵⁾ These clauses are drafted with many variations, including “the 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⁶⁾” “protection and security,” and “full legal protection and security.” A tribunal tends to interpret these various forms of the provision in a similar manner.⁷⁾

The following example is an article 1105(1) from the investment chapter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rticle 110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

3) Zeng Huaqun, *Bal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novative Path for BIT Practice*, 17 J. Int'l Econ. L, 299, 302-304 (2014) (argues that advantages of a model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is that it gives developed state a negotiating advantage since the party who drafts the model controls the negotiation. On contrary, most of developing nations are suffering from unequal bargaining power in negotiation because they have not prepared model BITs. Therefore, their position is merely accepting or slightly modifying to a model BIT prepared by developed country negotiating partner. Only a few developing states have prepared their model BITs and these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model BIT of developed countries); *see also* M. Som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207-2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the book points out that it is hard to expect developing nations to have legal department sophisticated enough understand and analyze the nuances in the variations in the terms used in IIA)

4) Christoph Schereuer,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in Armed Conflict*, in *Investment Law within International Law, Integrationist Perspectives* (Freya Baetens ed., 2013 (offer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security clauses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5) See, e.g.,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United States Uruguay BIT(2005), Art 5(1); Egypt-United Kingdom BIT(1975), Art 2(2)); ‘full physical security and protection’(Eritrea-Netherlands BIT(2003), Art 3(1); Hungary-Netherlands

6) Energy Charter Treaty, Art 10(1).

7) Schereuer, *supra* note 4, at 37

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hese provisions are designed to protect investors and investments against violent actions. In a number of cases, tribunals seemed to assume this standard only applies to physical security and to the host countries' duty to protect investors against violence targeted at persons and property that arise from state organs or private parties. Recently, tribunals extended this standard to legal protection.⁸⁾ In fact, some treaties explicitly provide for 'full protection and legal security.'⁹⁾

Generally, the obligation to provide protection and security does not require absolute liability.¹⁰⁾ The required standard is one of 'due diligence', that is, a reasonable degree of vigilance.¹¹⁾ For instance, both in *AAPL v Sri Lanka*,¹²⁾ and *Wena vs Egypt*,¹³⁾ the tribunal explicitly rejected a

claimant's argument that the provision granting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had created a strict or absolute liability.¹⁴⁾

In sum, the standard of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volves the obligation of the host state to limit the use of armed force where a protected investor is involved. It protects the investment against rebel or other forms of private violence. This obligation does not create strict liability, but rather an obligation of due diligence, to the extent of the reasonable use of the host state's capabilities.

2.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 terms "essential security interest," "public security," and "security interests" appear in a wide range. ¹⁵⁾ The following is the example of the clause in the art 18 of the 2004 US model BIT.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construed... to preclude a Party from applying

8) *Id.* at 6

9) See e.g. Art. 4(1) of the German-Argentine BIT of 9 April 1991.

10) Schreuer, *supra* note 4, at 10.

11) *Wena Hotels Ltd v Arab Republic of Egypt*, Award, 8 December 2000, 6 ICSID Reports 68, Para.84; *Saluka Investments BV(The Netherlands) v. The Czech Republic*, Partial Award, 17 March 2006, para. 484.

12) *AAPL v Sri. Lankka*, Award, 21 June 1990, 4 ICSID Reports 246, paras 45-53.

13) *Wena Hotels Ltd v Arab Republic of Egypt*, Award, 8 December 2000, 41 ILM 896(2002).

14) Schreuer, *supra* note 4, at 11.

15) See 2004 US Model BIT, art 18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 key issue with this clause i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essential security.

Should the threat only include a situation of armed attack or cover a broader range of issues with respect to economic or public health crises? The scope is ambiguous, bu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ppears to go well beyond pure military threats and encompasses other types of threats, such as economic crises that could have negative consequences on a security.¹⁶⁾¹⁷⁾

The GATT and WTO provide for exception based on “the protection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 but do not define the definition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¹⁸⁾¹⁹⁾ The article XXI exception has only been triggered by four cases and none of them have defined

the scope of the essential security.²⁰⁾

States have shown different preferred interpretations. The United States, has argued a broad interpretation of “essential security,” both in its submissions to the ICJ in the Oil Platforms case and in testimony by the State Department to the U.S. Senate in BIT ratification hearings.²¹⁾ The US executive’s understanding has been that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would include security-related actions taken in time of war or national emergency” and that “actions not arising from a state of war or national emergency must have a clear and direct relationship to the essential security of interest of the Party involved.”²²⁾ Indian BITs rather have high threshold, allowing the term to be triggered only in the most grave of situations.²³⁾ In *Union of India v Tulsiram Patel*, the Indian Supreme

16)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Investment Protection in Extraordinary Tim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Provision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Vir. J. Int’l L. 307, 350(2008).

17) Counter Memorial of the United States, *Oil Platforms*, 3.12(June 23, 1997) (identifying attacks on US war-ships and commercial vessels as “serious threats” to essential U.S. security interests).

18)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51.

19) See Peter Lindsay, Note, *The Ambiguity of GATT article XXI: subtle success of rampant failure?* 52 Duke, L. J. 1277, 1278(2003).

20)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51.

21) *Id.*

22) *Id.* (Letter of submittal from Strobe Talbott, U.S. Sec’y of State, to U.S. Senate (June 26, 1995) S. Treaty Doc. No 104-10)

court drew a distinction between ‘law and order,’ ‘public order,’ and ‘security of the State.’ The court ruled that situations which affect ‘public order’ are graver than those with which affect ‘law and order.’ The situations which affect ‘security of the State’ are gravest.²⁴⁾

The most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essential security” arises in the ICSID arbitrations against Argentina. The tribunal agreed with a broad reading of “essential security,” and ruled that the essential security and public order provisions should encompass economic emergencies.²⁵⁾ For instances, the tribunals in following three cases sued against Argentina LG&E v Argentine Republic²⁶⁾, LG&E v Argentine Republic²⁷⁾, and Enron v. Argentine Republic²⁸⁾ have examined whether

economic emergency qualifies as an essential security interest. The CMS and Enron tribunal reached same conclusions but the conclusions of the LG & E tribunal different despite the fact that all three cases faced similar facts with same government’s measure.²⁹⁾ The reason for disagreement between the tribunals was the degree of the gravity of the economic crisis.³⁰⁾ The CMS and Enron tribunals concluded the crisis was severe but did not result in total economic and social collapse, while the LG & E tribunal considered the crisis serious enough to threaten total collapse of the Government and the Argentine State.³¹⁾

3. War clauses

Many IIAs include provisions referring

23)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54.

24) *Id.*(Union of India and Another v. Tulsiram Patel and Others, A.I.R. 1985 S.C. 1416 (India)).

25) LG&E Energy Cor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Decision on Liability 203.

26)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Award 12 May, 2005.

27) *LG&E Energy Corp., L&E Capital Corp.,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Decision on Liability, 3 October 2006.

28) *Enron Corporation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3, Award, May 22, 2007.

29) Katia Yannaca-Small,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Chap 5 of the OCED Report, available at <https://www.oecd.org/investment/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40243411.pdf> (last visited Aug 14 2018).

30) *Id.* at 104

31) *Id.*

to war, states of emergency, revolutions, insurrections, and civil disturbances. These provisions provide for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in relation to restitution or compensation that the host states may take. The following example is Article 10.6 from the investment chapter in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TA”).

Article 10.6: Losses and Compensation

Investors of a Party whose investments suffer losses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revolt, insurrection, riot or other similar situations, and such losses as ones resulting from requisition or destruction of property, which was not caused in combat action or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accorded by the latter Party treatment,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forms of settle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which the latter Party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non-Party,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the investors concerned.

This provision imposes upon host countries to take non-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respect to measures adopted relating to losses suffered due to armed conflicts or civil strife. This type does not create substantive rights to restitution or compensation beyond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host state investors or investors of third countries.

Sometimes, IIAs go further than non-discrimination clauses and include strict and absolute requirements for compensating losses.³²⁾ Under these clauses, loss suffered by investors should be treated in analogy to expropriation.³³⁾ In other words, such clause requires compensation that is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³⁴⁾ The following example in the article 15 of the BIT

32) Schereuer, *supra* note 4, at 13.

33) *Id.*

34) This is called Hull formula. See. Barry Appleton, *Regulatory Takings: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11 N.Y.U. Envtl L. J. 35, 39-40(2002)(explains the origin of Hull formula under expropriation article. Secretary Hull established that a foreign government owed an investor “the right of prompt and just compensation.”, in case of expropriation. He expanded this basic international law concept-which was later termed the Hull Formula-to include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payment for the properties seized.” International agreements, like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contain specific compensation requirements in the case of an expropriation. NAFTA Article 1110 stipulates a process which requires NAFTA members to pay compensation to investors of other NAFTA members whose investments have been expropriated. The

between Austria and Libya contains such an extended war clause.

Article 5: Compensation for losses

(1) An investor of a Contracting Party who has suffered a loss relating to its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ue to war or to other armed conflict, state of emergency, revolution, insurrection, civil disturbance, or any other similar event, or acts of God or force majeure,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any other settlement,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st favourable to the investor.

(2) An investor of a Contracting Party who in any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uffers loss

(a) requisitioning of its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forces or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destruction of its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forces or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ich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shall in any case be accorded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restitution or compensation which in either case shall be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and,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2) and (3).

4. Public Order³⁵⁾

requirement for compensation under NAFTA Article 1110 is absolute. If there is a finding of expropriation, then there must be fair market compensation in the manner explicitly set ou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article.

35) The GATS 1995 adopted a general exceptions chapter with wording similar to Article XX of the GATT. However, the negotiators to GATS included two languages that are not found in the GATT: the first explicitly invokes the concept of “public order” within the GATS’ text. The second is that an explanatory footnote was added to clarify the scope of the “public order” exception. The GATS public morals clause provides, Subjects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and public order

The footnote to Article XIV(a) states that: “[t]he public order exception may be invoked only where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is posed to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With regards to 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order”, it has been referred to as “the fundamental national concepts of law, decency and moralit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international trade context, the WTO Panel in the *U.S.-Gambling* case opined that the term refers to the preservation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a society, as reflected in public policy and law); See Ignaz Seidl-

The “public order” is included in many IIAs concluded by Germany,³⁶⁾ the U.S.,³⁷⁾ India,³⁸⁾ Peru,³⁹⁾ and Turkey.⁴⁰⁾ The vagueness of the term “public order”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provision is addressed in a note following the public order clause in the Art 15 of the Columbia-Japan BIT as follows:

1. [...] nothing in this Agreement other than Article 12

[Treatment in Case of Strife]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at former Contracting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

- (b)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Note: The public order exception may be invoked only where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is posed to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The term “public order”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interpretative standards, which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buse.⁴¹⁾ The unsuccessful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included a public order exception.⁴²⁾ In a footnote, the draft noted that “the public order exception may be invoked only where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is posed to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However, there was a disagreement among negotiating partners with respect to what would constitute a “fundamental interest.”⁴³⁾

Hohenveldern, *Ordre Public (Public Order)*, in III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88, 789 (Rudolf Bernhardt ed., 1997) (noting that parties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providing for such an exception “may have different conceptions of *ordre public*”). In the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the issue of “public order” arises primarily in the context of riots on the streets or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ee, e.g., Edmund H. Bennett, *Public Meetings and Public Order: The United States*, 4 LAW Q. REV. 237 (1888); George H. Dession, *Sanction, Law and Public Order*, 1 VAND. L. REV. 8 (1947/1948) (defining public order as “that measure of peace and observance of basic value patterns of a culture upon which the fruitful pursuit of legitimate interests in the given society depends” and discussing it in the context of the methods of the criminal law as the “ultimate sanctions for the achievement and preservation of public order”);

36) See Germany-El Salvador BIT Art 3(7).

37) See. US-Argentine BIT Art XI.

38) See Agreement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Port-India Art 12.

39) See Peru-Venezuela BIT Art 3(5).

40) See Qatar-Turkey BIT Art VII(1).

41)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60.

42) For background and discussion, see Alexander Bohmer, *The Struggle for a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An Assessment of the Negotiation Process in the OECD*, 41 GER. Y.B. INT'L L. 267 (1998).

43)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59.

The U.S. BIT program regarded the “public order” as “measures taken pursuant to the Party’s police powers to ensure public health and safety.”⁴⁴⁾ United States trie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essential security and public order components of its BIT agreements.⁴⁵⁾ Their understanding has been that an essential security interest would include security-related actions taken in time of war or national emergency, while the “public order” covers law-enforcement related activities during times of peace.⁴⁶⁾

German courts have a different standard. Their “public security” includes the integrity of the legal order in the form of all written laws and regulation, while “public order” refers to the complementary category of unwritten social and extra legal norms that are deemed necessary for a peaceful society.⁴⁷⁾

5.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US BIT program have included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⁴⁸⁾ Similar clause can be found in the 2004 Canadian Model BIT⁴⁹⁾ and the BIT between Turkey and Qatar.⁵⁰⁾ Following is the example of the clause in the Art 10(4) of the 2004 Canadian Model BI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Party from taking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clause allows states to take actions manda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furtherance of its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⁵¹⁾ The states must not breach any obligations under BIT if they are acting in

44) *Id.* (President’s Message to the Senate Transmitting the Mongolia-US BIT with Annex and Protocol, Letter of Submittal by Sec’y of State Strobe Talbot (June 16, 1995)).

45) *Id.*

46) *Id.*

47) *Id.*

48) See US-Panama BIT, Art X(1).

49) See Canadian 2004 Model FIPA Art 10(4)(c).

50) See Qatar-Turkey BIT, Art VII(1).

51) See U.N. charter Art 24.

furtherance of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⁵²⁾ Some US BITs have clarified the meaning of this clause. For instance, in the protocol to the US-Argentina BIT, “the parties understand that, with respect to rights reserved in Article XI of the Treaty,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f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means obligation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⁵³⁾

6. Extreme Emergency⁵⁴⁾

India BITs include the term “extreme emergency” in their BITs. Following is the example in the Art 11(20) of the India-Swiss BIT.

Article 11 Applicable Laws

(1) All investments shall, subject to this Agreement, be governed by the law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such investments are mad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o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preclude the host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ction for the protecti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in situations of extreme emergenc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normally and reasonably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None of the tribunals have yet defined the scope of the term “extreme emergency.”⁵⁵⁾ There is no case law or scholarly commentary from India on the clause. The clause seems to have broad scope encompassing different types of emergencies. But the threshold for triggering this clause should be “extreme.” Whether this clause applied only to states or other circumstances is unclear. In recent India’s domestic case, the Indian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common thread in all the emergency provisions is that the resort to such provision has to b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n there be the real and grave situation calling for the drastic action.” This standard - based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grave threat - might be the best option of the minimum threshold for triggering the extreme emergency clause in Indian BIT agreements.⁵⁶⁾

52) See U.N charter Art 25.

53) See US-Argentina BIT , Protocol ¶ 6.

54)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55.

55)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67.

56) *Id.*

B. Problems: The Ambiguity In Scope And Definition Of The Devic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se devices are ambiguity and uncertainty in terms of scope and definition. The devices lack objective standard of review and decisions vary case by case.

The self judging nature of the devices aggravates the problems.⁵⁷⁾ In many IIAs, contracting parties have discretion when there is a threat to their national security and hot to respond to it. The typical clause states that the treaty shall not preclude a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such measures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national security. Then, the tribunals are barred from a judicial review of the measure at stake. The problem is that the broadness and opaqueness of the term “national security” allows host countries to restrict foreign investments for various reasons. Restrictions may apply in respect of a numerous economic sectors or investment activities, which are susceptible to the abuse.

Non-self judging clause also has problems.⁵⁸⁾ Non-self judging clause has no specifications as to a degree of deference to be accord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Then, the arbitrators are entitled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measure and to make their assessment as to the standard of the devices. The major task for the arbitration tribunal would be to decide the adequate boundaries of the scope of the devices, which becomes more difficult for predict the consistent awards.

Given these uncertainties, it is no surprise that recent jurisprudence has not always been consistent. Each device has different boundaries for when and how host countries could waive their obligations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s. Tribunals’ inconsistent rulings on the scope of the identical terms aggravate the problem. A number of arbitral awards concerning the legality of emergency measures taken by Argentina show the inconsistent ruling of tribunals. In these awards, the tribunals had to determine whether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n the BIT between Argentina and the US

57) Burke-White & Staden, *supra* note 16, at 376 (generally explains the self judging nature of the devices)

58) Yannaca-Small, *supra* note 29, at 104.

covers the emergency action. In the cases *CMS v Argentina*⁵⁹), *Enron v Argentina*⁶⁰) and *Sempra v Argentina*⁶¹), the tribunals ruled that the exception was inapplicable, the tribunals in *LG & E v Argentina*⁶²) and *Continental Casualty*⁶³) resulted in an opposite conclusion.

III. Solutions: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To respond to the uncertainty and ambiguity, this article suggests the parties to actively utilize a non-conforming measure list and an Annex to clarify in what circumstances the parties would interrupt their foreign investors. The parties could put their domestic law in

either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or an Annex to clarify the boundaries of their regulatory power to protect essential security or public order. For instances, some IIAs inserted public order exception or essential security exception in the non-conforming measures list under the negative list approach. The parties may have preexisting domestic rules and regulations that allow them to block or intervene on behalf of foreign investments in case of armed conflict. If they put these measures on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the parties could successfully waive their rights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ed domestic measures. Korea-U.S. FTA⁶⁴) non-conforming measure

59) *CMS Gas Transmission Co. v The Republic of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8 (2005).

60) *Enron Corp. Ponderosa Assets v The Republic of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3 (2007).

61)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28 September 2007.

62) *LG&E Energy Corp. et al. v The Republic of Argentina*. ICSID case no. ARB/02/1 (2006).

63)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9A, award of 5 September 2008.

64)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n June 30, 2007. On December 3, 2010,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ncluded new agreements, reflected in letters signed on February 10, 2011, that provide new market access and level the playing field for U.S. auto manufacturers and workers. Congress approved the agreement on October 12, 2011, and Korea's National Assembly approved it on November 22, 2011.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mpleted their review of the measures both sides had taken to implement the FTA and exchanged diplomatic notes on February 21 agreeing to bring the agreement into force on March 15, 2012.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 (accessed on April 14 2016).

list is a good example.⁶⁵⁾ Korea carved out two local rules stated in “Existing Measure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4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5. The contents of the two local rules are described in the “Description” section. These two local rules allow the Korean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acquisition and establishment of foreign investment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order. Now, the Korea-U.S. FTA is in force, and U.S. investors can always look up

those two local rules and find out in what circumstances their investments may be interrupted by the Korean government’s possible measures.

In addition to the non-conforming measures list, the parties could always use the Annex of the IIA to carve out their domestic law to protect essential security interest of public order. The Annex of the investment chapter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EPA) is a good example of this.⁶⁶⁾ India successfully carved out their

65) A non-conforming measure list in the Korea-US FTA.

Sector:	All Sectors
Obligations Concerned: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3) Performance Requirements (Article 11.8)
Description: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r acquisition of an investment, any measure that i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2007) and Article 5 of the <i>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2007), provided that Korea promptly provides written notice to the United States that it has adopted such a measure and that the measure: [...]
Existing Measures:	<i>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Law No. 8380, April 11, 2007), Article 4 <i>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 (Presidential Decree No. 19826, Jan 05, 2007), Article 5

66) Annex 10-B of the Investment chapter in the CEPA

ANNEX 10-B (SECURITY EXCEPTIONS FOR INVESTMENT)

The Parties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with respect to interpretation and/or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 (a) th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18.2(d) are measures where the intention and objective of the Party imposing the measures is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se measures shall be impos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may be found in any of its laws or regulations:

domestic law,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 in the Annex 10-B of the CEPA. The paragraph (a)(i) explains that the applicable measures to protect essential security interest is the regulations framed under the FEMA. Under the same paragraph, India promis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concerned upon request by Korea. That is, Korea could ask for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contents of the domestic law to figure out when and how India would trigger such law to protect essential security interest. The CEPA have been ratified and Korean investors could always find out when and how India could trigger their domestic law to protect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 India's boundary of sovereignty power is clearly specified and Korean investors now have a better idea as to when their investment projects may be interrupted by India's government.

The article does not argue that these suggestions would ultimately solve the tribunals' inconsistent ruling and lack of interpretative standards in the various armed conflict devices. Rather,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se suggestions may be a practical and realistic solution to tackle this problem. Instead of inserting an uncertain nature of devices in the main text of IIA, the parties could come up with their domestic law that governs the armed conflict situations and carves it out from the IIA. The parties, especially a host developing nation, may suffer from lack of the institutional capacity to sort out all of their armed conflict-related domestic law and stipulated in the non-conforming measures list. Moreover, they may not have a sufficient negotiation skill or a bargaining power to attach additional Annex in the back of IIA. However, once the parties overcome these hurdles and

-
- (i) In the case of India, the applicable measures referred to in Article 10.18.2(d) are essentially set out in the regulations framed under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 India shall upon request by Korea, provid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concerned; and
 - (ii) In the case of Korea- Korea does not presently adopt or maintain any unilateral measures against a non-Party or investor of a non-Party in its laws or regulations; and
- (b) the measures which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a non-Party or investors of a non-Party shall not impinge upon the other Party's sovereign rights to conduct its foreign policy nor shall it prohibit enterprises of foreign enterprises that are subject to such measures from establishing themselves in the other Party.

successfully carve out their domestic law, the permissible boundary of the policy space is clearly stipulated, which increases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intervening measures.

IV. Conclusions

The article introduced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protection clauses in the armed conflict situation and its associated problems of ambiguity and uncertainty. The article further suggests to sort out the parties' domestic law that governs the foreign investment intervening measures in case of

the armed conflict situation or emergency. Once such domestic law is carved out through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or an Annex, the boundaries of sovereignty power is clearly specified and the parties can better predict in what circumstance the foreign investments may be interrupted.

Although the tribunals are not clear about the effect of armed conflict on investment protection, the legal potential is considerable, and it is quite likely that we will see more cases in the future. More researched should be done with respect to a practical and realistic solution to this problem.

참 고 문 헌

1. Katia Tannaca-Small,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Chpat.5) in International Investment Perspectives: Freedom of Investment in a changing world, OECD (2007);
2.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Staden, Investment Protection in Extraordinary Tim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provision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48 Va.J. Int'l. L. 307 (2008)
3. Preserving flexibility in IIAs: The Use of Reservation, UNCDAD seri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2006
4. Dominic Mcgoldrick, The Interface between public emergency powers and international law, 2 Int'l J. Const. L. 380 (2004)
5. Christoph Schereuer,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in Armed Conflict, in Investment Law within International Law, Integrationist Perspectives (Freya Baetens ed., 2013
6. Barry Appleton, Regulatory Takings: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11 N.Y.U. EIntl L. J. 35, 39-40(2002)
7. IgnazSeidl-Hohenveldern, Ordre Public (Public Order), in III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88, 789 (Rudolf Bernhardt ed., 1997)
8. Edmund H. Bennett, Public Meetingsand Public Order: The United States, 4 LAW Q. REV. 237 (1888)
9. George H. Dession, Sanction, Lawand Public Order, 1 VAND. L.REV. 8 (1947-1948)
10. Alexander Böhmer, The Struggle for a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An Assessment of the Negotiation Process in the OECD, 41 GER. Y.B. INT'L L.267 (1998).
11. Buchanan, In Defense of Caveat Emptor, 38 U. Cm.L. REV. 64 (1970)

[국문초록]

국제투자협정상 무력충돌 시 해외투자보호 관련 규정(조문):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제투자협정상,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분쟁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보호 조항이 존재한다. 당사국들은 필수안보 조항, 전쟁조항, 공공 질서 등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유지시킨다. 본 원고는 이러한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의무화 하는 투자자보호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 해당 조항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본 원고는 이러한 투자자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언제 적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중재판정부에 따라 해석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안 및 부속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당사국들은 유보안 및 부속서 내 국내법 삽입을 통하여 국내 규정 상 어떠한 경우에 한해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유보안 및 부속서에 적시된 국내법의 규정을 통해 어느 경우에 한하여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투자자보호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 인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

주제어

국제투자협정, 무력분쟁조항, 긴급상황, 유보안, 부속서

[ABSTRACT]

Various Foreign Investments Protection Clauses in armed conflic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oblems and Solution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has various devices to impose upon host countries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s in case of armed conflicts or other national emergencies. However, there is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its definitions and the scope of these devices, which confuses investors and tribunal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roducing various types of such devices and examines an ambiguous nature of such devices in their scope and definitions. To respond such ambiguity, the article suggests utilizing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The parties could carve out their domestic law in both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to specify in what circumstances they could exercise their domestic measures to protect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public order. This will clarify the boundary of regulatory power over an armed conflict situation. Now,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intervening measures are increased because foreign investors could now find out in what circumstances their investments may be interrupted.

Key word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law of armed conflict, essential security clause,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nex

「통상법률」 연구윤리규정

2009. 6. 30 제정

제1장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상법률」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상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투고 및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물의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통지 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3조(서약)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2)와 (별지3)의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결과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통상법률」 제00호)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저자(들)은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통상법률」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은 본 논문이 「통상법률」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통상법률」에 위임합니다.

200 년 월 일

저자	성명	소속	이메일(연락처)	위임여부(O,X)	서명
제 1 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별지2)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편집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 ○ ○ ①인

(별지3)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 6. 30. 신설)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심사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의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①인

「통상법률」 원고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3년 1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률」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제3조(원고 심사 및 편집) 「통상법률」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상법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률」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일반사항
2. 원고의 접수 및 심사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장 원고의 심사

제6조(원고 심사) ① 제출된 원고는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고 심사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법무부는 원고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원고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 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논리적 완결성
2. 내용의 독창성
3. 학문적 기여도
4. 문장 및 각주 처리의 정확성
5. 기타 위원회에서 「통상법률」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게재
 2. 수정보완 후 게재
 3. 게재 유보
 4. 게재 불가
- ② 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③ ‘수정보완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는 필자가 수정하여 제출하고 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면 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원고의 게재 등

제9조(원고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원고는 「통상법률」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률」의 내용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는 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률」은 매분기말의 전월 20일에 발행한다.

제10조(자료의 전송) 위원회는 「통상법률」을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의 필자는 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원고는 전송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11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통상법률」 원고 작성 방법

제1조(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연구논문, 사례연구, 연구자료, 해외동향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 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3. 각 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면수, 출판연도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간행연월

3. 판 례 : 대법원 1900. 00. 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1900년, 000면) 또는
대판 1900. 00. 00, 00다0000
4.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 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서기를 표시한다.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 등은 각 단어의 첫 자 외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
한다.
- ⑩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표기하고,
로마자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p.’와 같은 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을 표기하며,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을 사용한다.
- ⑪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예 :
가석방제도(parole system)]
- ⑫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 각 마침표로 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성을 먼저 쓰고, 공저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저자만 성을 먼저 쓴다.
 4.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복수인 경우, 문헌이 출판된 연도순에 의하여 나
열한다.
- ⑬ 원고 뒷부분에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words, 국문 및 영문)를 10개
내외로 기재한다.
- ⑭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
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의 간사
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송부한다.

[편집자문위원]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편집위원장]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편집위원]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성준 (일리노이공과대 시카고 켄트로스쿨 교수)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담당관)

계 간 지 **통 상 법 률**

2018년 8월 20일 발행(통권 제140호)

1994년 2월 20일 등록(97-10-5-11)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225-07

ISSN : 1598-4915

발행인 : 법무부장관 박 상 기

편집인 : 법 무 실 장 이 용 구

발행처 : 법무부 / 편집실 : 국제법무과 / 전화 : 2110-3663 / FAX : 2110-0327

주 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4호

인 쇄 : 성 진 사 : 031-388-4485

[비매품]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40

Aug. 20, 2018

Publisher Park, Sang-ki / Minister of Justice

Editor Lee, Yong-gu / Deputy Minister for Legal Affairs

Edited in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Published Quarterly by

Ministry of Justice

※ 「통상법률」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